

‘무개념’ 광주 기초의원 시민 비난 봇물

출장비 유용·외유성 연수 논란
심사절차 생략 도덕성 시비도
민의를 담은 ‘밥그릇 쟁기기’ 눈총



충장축제 퍼레이드 지난 5일 광주 금남로에서 ‘추억의 충장축제’ 하이라이트인 충장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다. 수창초교에서 문화전당 초입까지 1.6km에 걸쳐 진행된 퍼레이드는 5개 자치구를 포함 5,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김태규 기자

광주지역 일부 기초의원들이 수준 이하의 의정 행태가 도를 넘어선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공금(출장비)을 유용해 외유성 관광을 다녀오는가 하면 심사절차를 무시하고 해외연수를 떠나는 등 도덕성과 자질 논란까지 일면서 기초의원 폐지론이 다시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6일 광주지역 일선 구청과 구의회 등에 따르면 서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광주시당의 ‘국외연수 사전심사의 규칙’을 어기고 호주로 해외연수를 다녀와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7월 ‘광주시당 지방의원 국외연수 규칙’을 만들어 해외연수 30일 전까지 자문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자문과 심사를 받도록 했지만, 서구의회는 이를 무시했다.

의원들은 출장 10일 전인 지난달 20일경 시당에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시일이 촉박해 결국 심사를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연수에 대한 자체 심사도 ‘구정장 요청시 자체 심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이용해 건너뛰는 등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방의원이라는 특권(?)을 누리며 기본적인 절차마저 생략했다는 지적이다.

또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에 2억 8,150만원의 시민헌세를 투입하면서 재정투자 심사를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의원들은 재정투자 심사에 대한 절차문제가 도마위에 오르자 서면으로 원포인트 심사를 열어 집행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앞서 북구의회는 고점례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 사무국 직원 3명 등 7명이 지난달 26-27일 이틀간 통영시의회 방문을 명목으로 출장을 떠났으나, 관광성 일정만 소화해 거짓출장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일자 의정단은 출장비를 반납

했지만 출장계획서는 물론 현재까지 출장보고서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

이를 두고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북구지부가 직원 내부 게시판에 ‘공금을 유용해 외유출장을 다녀온 고점례 의장 등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보도와 공무원 노조의 성명 등 논란이 끊이질 않자 고 의장은 ‘외유출장 논란에 대해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직원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고 의장은 사과문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민의 대변자라는 의장 신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은 반성과 함께 주민의 공복으로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엔 광산구의회 민주당 소속 A의원이 노 래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의명을 요구한 모 구청 공무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기초의원들이 자신의 위치가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제멋대로 하고 있다”며 “제 역할도 못하는 의회와 의원이라면 존재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나라 기자

“한전공대 설립, 정치권 협력 필요”

범시도민 지원위원회 성명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정치권의 조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 광주·전남 범시도민 지원위원회(지원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에너지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요람이 될 한전공대의 정상적 설립에 정치권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원위는 또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전공대 설립을 반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반대성명도 발표했다”며 “이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전공대 설립은 낙후한 전남과 호남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대 현안이다”며 “지역인 열망과 지지를 담아 국가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원위는 “미래 에너지산업을 연구하고 이끌기 위해선 특화대학인 한전공대가 필요하며, 에너지 메카의 핵심축이자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질 핵심 연구시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전공대는 대학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어우러진 세계 최고의 에너지 밸리를 만드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민 기자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

광주시 내달 마무리한다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11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사업협약을 체결한다.

광주시는 8일 광주시청에서 민간공원 민관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민관거버넌스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자문기구로 광주시 공무원·전문가·시민단체·교수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회의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공원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사업협약 체결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 수사에 따른 사업지질 우려를 해명하고 내년 6월 공원일몰제 시행까지 행정절차 추진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의 특정감사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뀔 중앙공원 1·2지구와 관련해 특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시는 이달 내로 1단계 특례사업(마복·수광·송암·봉선공원)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까지 2단계(중앙·중외·일곡·운암산·신용공원)도 협약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여수 상포지구 개발사업 특혜의혹 재수사해야”

시의회 “이순신 마린사 사업도 규명 필요”...여수시 무대응 일관

〈속보〉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현안사업들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비리사실(본보 지난 4월 1면)이 확인된 상포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재수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권오봉 여수시장은 상포지구 개발사업 비리에 대해 ‘전일시장 일’로 선긋기를 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시장책임자로서 정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다른 현안과 관련된 의혹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여수시의회 등에 따르면 여수시의회 돌산 상포지구 실태파악특별위원회(이하 상포특위)는 “감사원 감사로 행정행위 부당사항이 드러난 만큼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기관이 재수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포특위는 특히 “이제라도 전·현직 여수시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 상포특위 활동을 방해했던 정치인 등은 지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며 “상포지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시민헌세가 투입되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상포특위는 “감사원은 여수시가 허가권자인 전남도와 협의 없이 인가조건을 변경해 부당하게 준공검사를 처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하수관로 설계를 변경하고 우수관 20m를 설치하지도 않았지만, 여수시는 준공 승인한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최근 지역 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여수 마리나리조트 위탁사업에 대한 의혹 규명과 함께 사업계획부터 위탁 선정과정까지 전면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은 “웅천 이순신 마린사 위탁업체 선정 관련 비리 혐의로 수탁업체는 물론

여수시 간부공무원까지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웅천동 1692번지 지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 연장 및 목적변경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공행상의 목소리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현안사업 특혜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며 “집행부가 자료제출 등에 비협조할 경우 관련 특위 구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이같은 지역 여론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상포지구 감사원 감사 직후 기자들에게 발송한 입장문도 ‘권오봉 시장의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일면서 시정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은 상태다. 여수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다”며 “상포지구에 대한 사항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2019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2019. 10. 25(금) - 27(일) 3일간
완도해변공원 / 완도타워 / 완도수목원 / 청산도 일원
주최·주관 청정완도가을빛여행추진위원회